

건설동향브리핑

제398호 (2013. 2. 11)

■ 경제 동향

- 1월 CCSI 3.5p 하락한 65.4 기록

■ 정책 · 경영

-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새 정부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출구 전략과 병행돼야

■ 정보 마당

- 워크아웃 · 법정관리 업체 자구 노력, 축소 위주의 구조조정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버려야 할 두 가지 문화 유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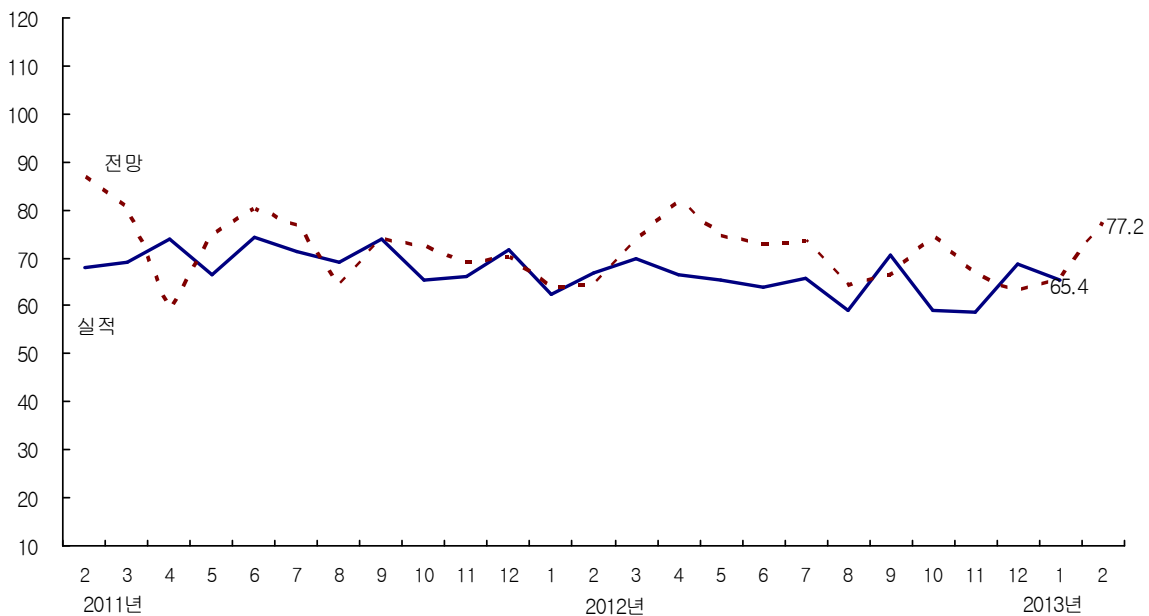
1월 CBSI 3.5p 하락한 65.4 기록

- 계절적 영향으로 소폭 하락, 2월 전망치 77.2로 침체 수준 개선 전망 -

■ 연초 공공공사 물량 감소 등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3.5p 감소

- 2013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5p 하락한 65.4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작년 12월에 큰 폭으로 상승(전월비 10.2p 상승)해 68.9를 기록했는데,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함.
 - 통상적으로 1월에는 공공공사의 발주 물량이 급감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부문의 물량도 감소하는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 하락폭이 2012년 1월(전월비 9.3p 하락)과 비교해서는 작았고, 지수 자체도 작년 10월의 58.9, 11월의 58.7보다는 양호해 건설업체 체감 경기가 추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 및 중소기업체 지수 하락, 중견업체 지수 소폭 상승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체 지수가 전월비 하락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작년 12월에 전월비 14.3p 상승해 92.9를 기록했으나, 올 1월에는 전월비 7.2p 하락한 85.7를 기록하며 다시 90선 아래로 하락함.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비 6.3p 하락한 40.0을 기록해 체감 경기 침체의 수준이 다시 악화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2.7p 상승한 66.7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12월의 지수가 중견업체 유동성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12월 지수로는 2009년 12월 이후 4년래 가장 저조한 64.0에 그친 기저 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9.9	66.4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5.4	65.6	77.2	
규모별	대형	85.7	71.4	92.3	92.9	92.9	80.0	91.7	76.9	78.6	92.9	85.7	78.6	92.9
	중견	68.0	72.0	58.3	50.0	56.0	46.2	61.5	57.7	55.6	64.0	66.7	62.5	76.9
	중소	53.4	54.1	41.8	45.6	44.8	49.1	56.4	39.3	38.9	46.3	40.0	53.8	59.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월 전망치, 1월 실적치 대비 11.8p 상승한 77.2 기록

- 2013년 2월 CBSI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11.8p 상승한 77.2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 10개월 만인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2월에는 건설 경기 침체의 수준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통상적으로 2월에도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민간 부문도 계절적 요인 및 거시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제로 2월 CBSI 실적치가 70선 중반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민간 투자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재정 방어적 정책으로 투자 매력도 크게 저하, 적정 수익 확보 및 정책적 신뢰감 형성 필요 -

■ 현황과 문제점

- 민간 투자 사업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로, 철도, 환경, 국방, 학교 등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공급하여 왔음.
 - 2010년 9월 기준으로, 총 628건(고시 기준) 사업에 총 투자비 95.9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수익형(BTO, Build-Transfer-Operate) 사업이 227건에 70.2조원, 임대형(BTL, Build-Transfer-Lease) 사업이 401건으로 25.7조원 규모임.
- 재정 투자 대비 민간 투자의 비중은 1995년에는 0.5%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6.3%로 대폭 확대되어 우리나라 SOC 시설 확충에 중요한 축을 담당
 - 하지만, 초기에 추진되었던 민자 사업들은 부실한 교통 수요 예측 및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재정 사업 대비 높은 통행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에 따라 재정 방어적인 민간 투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자 사업이 고위험·저수익(High Risk & Low Return) 구조로 변화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저하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건설 보조금 축소, 부(負)의 재정 지원 등
 - 금융기관의 금융 약정(투자 또는 대출) 기피로 실시 계획 승인 신청 및 착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
- 2011년도 민간 투자 금액은 2.2조원으로, 2008~10년의 절반으로 줄었고, 재정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대로 낮아짐.
- 또한, 최근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당초 실시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 MRG 인하 등을 요구하는 사례 증가
 -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 증가로서 민자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 새 정부 들어 개선되어야 할 건설 관련 과제들을 건설 정책·제도 부문과 주택·부동산 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정책·제도 부문 3회차임.

■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기본적으로 민자 사업의 적정 수익을 확보해주고 정부가 민자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신뢰감의 형성 필요
- 현재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상의 총 49개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데, 대상 사업의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민자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심의를 거쳐 민간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민자 사업의 추진이 가능
- R(Rehabilitate)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성능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의 모색이 필요
- 부대·부속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부대·부속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바, 사업 수익률의 사후 확정 및 반영 등 다각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
- BTO 사업과 BTL 사업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혼합 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함.
 - 철도 시설 등 토목 시설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 사립 학교, 대학 기숙사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 BTL 대상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시설(유치원, 보육 시설, 요양원, 상수도 시설 등), 환경 필수 시설 등에서 추가적 시설 유형의 발굴 필요
- 무료 도로(Shadow Toll)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Real Toll)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양허 기간 동안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km당)에 기초해 특수목적회사(DBFO, Design-Build-Finance-Operate)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 무료 도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부족한 정부 재원의 보완 및 도로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새 정부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출구 전략과 병행돼야*

- 기존의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광의의 공공 주택 차원에서 역할 분담 필요 -

■ 보금자리주택 사업,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공공 사업자 재무 여건으로 정권 말 실적 감소

- MB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 공약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목표**(2009~12년까지 74만 호)의 73% 수준(53.8만 호)을 달성(인·허가 기준)하는 데 그침.
 - MB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2012년까지 당초 40만 호였던 목표치를 60만 호로 수정한 바 있음.
 -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된 수도권의 주택 경기 침체, 공공 사업 시행자(LH공사)의 재무 여건 악화, 일부 사업지에서의 사업 승인 연기 등의 이유로 수도권은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60만 호 계획, 35.2만 호 실적)을 달성하는 데 그침.
 - 정권 말기에는 핵심 추진 사업의 실적을 밀어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추진 실적이 사업을 착수한 이래 최저 수준이었음.

<보금자리주택 공급 실적(사업 승인 기준, 매입 포함)>

(단위 : 만 호)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총 건설(사업 승인) 실적		53.8	14.6	16.5	12.6	10.1
유형별	분양(계획 70만 호)	25.0	7.1	8.2	5.2	4.5
	임대(계획 80만 호)	28.8	7.5	8.3	7.4	5.6
	영구 임대	2.3	0.4	1.0	0.6	0.3
	국민 임대	14.9	4.9	3.5	3.6	2.9
	공공 임대	11.6	2.2	3.8	3.2	2.4
지역별	수도권 (계획 ~2012 : 60만 호)	35.2	10.3	12.9	6.9	5.1
	지방(계획 ~2012 : 14만 호)	18.6	4.3	3.6	5.7	5.0
공급 방식별	건설	48.6	13.6	15.6	11.0	8.4
	매입	5.2	1.0	0.9	1.6	1.7

자료 : 국토해양부

■ 행복주택과의 역할 분담 통해 사업 물량과 시기 조절 등 보금자리주택의 출구 전략 필요

-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은 그 동안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의 주택을 단기간 내 과도

* 새 정부 들어 개선되어야 할 건설 관련 과제들을 건설 정책·제도 부문과 주택·부동산 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주택·부동산 부문 3회차임.

** 정부는 당초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호, 지방 14만 호를 건설하는 조기 공급 방안(2009. 8. 27)을 발표한 바 있음.

하게 공급함에 따른 민간 주택시장의 구축 효과, 그린벨트의 훼손, 수혜 대상의 적절성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음.

- 공급 대상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외 그린벨트 지역에 공급되는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은 가격이 워낙 저렴(주변 시세의 50% 수준)해 인근 민영 주택의 구매를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 대기 수요를 확대하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과 민간 주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문제, 해당 지자체의 반발로 인한 행정 소송(지구 지정 취소)과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 자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 새 정부는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공공 주택 등 ‘행복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먼저 보금자리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분양 임대 포함)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물량과 공급 시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행복주택 역시 광의의 공공 주택(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방식이 추가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단순 명칭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우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공급 시기와 물량 조율도 요구됨.
 -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행복주택을 포함한 임대 주택 전체의 건설 재원 확보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비용은 주택 공급 원가의 18~20% 수준이며,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차입, LH공사의 예산,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따라서, 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정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LH공사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사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공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비중을 높이거나 생산 단가를 현격하게 낮추는 등 근본적으로 임대 주택 건설 비용과 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임(현재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건설되는 임대 주택은 연간 3.5만 호 수준에 불과).
 - ‘행복주택’의 공급에 앞서 기존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 만큼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계획을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공공 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중 입지 특성상 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지자체 반발이 심한 사업 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기 진행 중인 사업 지구의 경우에도 시장성이 높은 지역은 민간 참여 사업(민간에게 택지 매각)으로 전환하여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됨.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워크아웃 · 법정관리 업체 자구 노력, 축소 위주의 구조조정

-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업체 애로 사항 조사 결과 분석* -

■ 워크아웃 · 법정관리 업체 ‘미분양 증가’로 매출 감소 및 금융 비용 증가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전후하여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으로는 ‘분양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가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과다한 PF 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 부실 증가’가 25.0%로서, 과반수 이상의 업체들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공공공사 저가 물량 수주’와 ‘과다한 외부 차입에 의한 금융 비용 증가’라는 응답도 각각 11.4%를 차지
-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업체들의 수익 발생 기간과 부실화된 연도를 볼 때 다수의 기업들이 부실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 장기 침체의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주 저조와 부채 과다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의 증가가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부실화되었지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직전의 이익 실현 기간 조사에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4개 사에 불과함.
 - 또한,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비율이 급격히 악화된 시기가 미국발 금융 위기와 유럽발 금융 위기가 겹쳐 국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본격화된 2010년과 2011년인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기업들의 부실화에는 외부적 환경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음.



* 본 조사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업체와 졸업 업체 등 총 23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악화의 원인과 자구 노력 및 지원 요망 사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제397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2회차임.

■ 주요 자구 노력은 ‘자산 매각, 인력 감축, 경비 절감’

- 주요 자구 노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유 자산의 매각’이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력 감축(23.9%)’, ‘경비 등 원가 절감(21.7%)’의 순이었음.
- 23개 업체들의 상시 종업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만 1,503명이던 상시 종업원이 2011년에는 8,569명으로 2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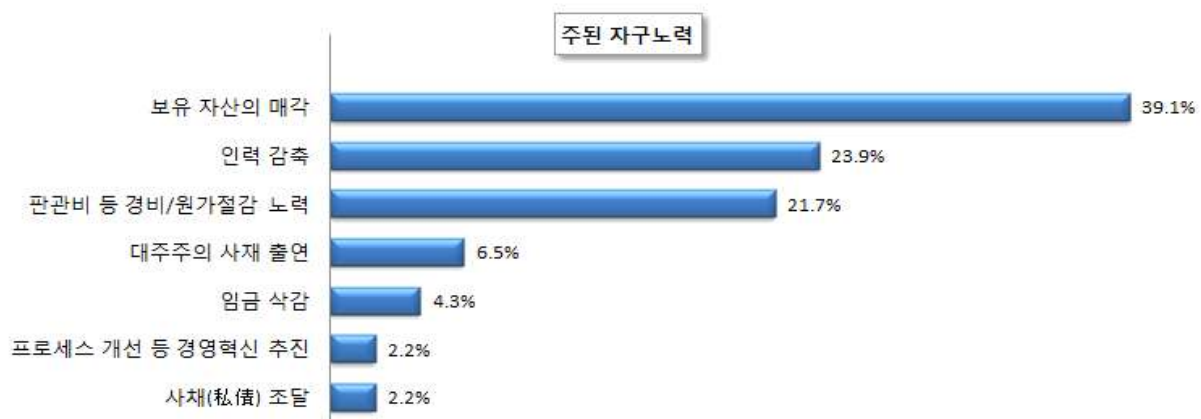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23개 사의 상시 종업원 수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상시 종업원 수	11,503	11,834	11,219	10,381	8,569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대부분의 자구 노력으로는 단기간에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들이 선호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나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 혁신 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워크아웃 · 법정관리, 기업 연명에 도움되나 정상화보다는 채권단의 채권 회수 우선시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경영 개선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혼재
 - 금리 인하, 채무 상환 유예 및 채무 재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 신인도의 하락, 자산 및 유망 사업의 매각과 이를 제어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 각종 보증(해외 포함) 불가로 인한 신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2.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 안전 분야 워크숍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이 참석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 실시
	경기도 주택도시국	• 주택도시국 주최, 주택 정책 심의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20년 경기도 주택 종합 계획 최종안 심의
2. 6	국토해양부	• 규제개선감시위원회 주최, 정기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불합리한 제도·관행(이른바 ‘손톱 밑 가시’)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 모색
	국토해양부	• 건설인력기재과 주최, ‘건설 기능 인력 양성 세부 추진 방안’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석 - 건설 기능인 양성 지원 대책에 따른 향후 세부 시행 계획 수립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최, ‘노후 공동 주택과 국가 정책 포럼’에 건설산업연구실 윤영선 연구위원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협력분과 주최, 규제개혁심의회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참석 -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한 회의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3. 2. 26(화)~28(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문의 및 참조 : 연구원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건설산업 최고 전략 과정(ACPMP)」 10기 교육생 모집

- 연구원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건설산업 최고 전략 과정(ACPMP)’의 제10기 교육생을 모집 중임.
- 모집 대상 :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부이사관급 이상 간부, 건설업체 CEO 및 임원, 건설 관련 단체 및 공공 기관 경영 간부 등
- 교육 기간 : 2013년 3월 26일~12월 3일까지 9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5~9시 30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15일(금)까지
- 문의 : 서울대 ACPMP 사무국(<http://acpmp.ac.kr>) 모집 담당자(02-882-2623), 연구원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버려야 할 두 가지 문화 유산

지난 연말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건설인들은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 건설은 관심 밖이고 온통 복지 이야기뿐이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인수위 활동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부동산 대책과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이 있긴 하지만 건설인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올 법도 한 데 보이지 않는다. 확실히 건설산업에 대한 기대가 예전 같지 않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 건설산업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를 수요의존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요창출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들은 여전히 수요의존시대의 타성에 젖어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야말로 건설산업 위기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시장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건설산업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다. 수요의존시대에는 말 그대로 의존적 태도만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요창출시대에는 건설기업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 앞날을 개척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건설업계가 과거의 문화에 집착하는 한 건설산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건설산업이 진정으로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문화 유산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나친 정부의존문화를 버려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 눈치를 보고, 정부 탓을 하고,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의존적 문화를 버려야 한다. 이제 정부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다. 고착화된 정부 의존 문화는 주종주의, 갑을의식, 명령지시문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화들을 만든 뿌리이기도 하다. 이런 문화들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수요창출시대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둘째, 고착화된 업역주의를 버려야 한다. 울타리를 쳐서 시장을 갈기갈기 분할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것은 시장 물량이 넘쳐나고 기술 발전이 빠르지 않은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수요창출시대이다. 무한의 과멸적 경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업역의 틀을 버리는 대신 공정경쟁의 물을 강고하게 확립하고, 자발적인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2013. 1. 18>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